

중소 대북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

양범직 / 한화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외화 내빈의 양상을 보이는 남북 경험

최 근 전개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양상을 보노라면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관계가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외화 내빈의 양상으로 흐르지 않나 하는 점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른 바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정경 분리에 의한 남북 경험의 추진 방침을 밝혀왔고, 생산 설비의 반출 제한 폐지, 투자 규모 제한 폐지, 투자 제한 업종의 네거티브리스트화, 기업인 방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남북 경험 활성화 조치도 발표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은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판문점을 통한 방북을 실현하였다. 또 금강산 공동 개발을 비롯하여 자동차, 조선, 제철, 공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왔다. 비록 베이징의 비료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긴 했지만 군장성급회담이 개최되었고 정부는 8·15 통일대축전 개최도 원칙적인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남북간의 이런 화해 무드

는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마저 잠재움으로써 남북 관계의 질적인 변화, 나아가 남북 경험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빙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 폭풍은 남북 경험의 분야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물론, IMF 충격이 실질적인 남북 경험을 위축시킬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측된 바 있다. 또 그동안의 남북 경험이 경제외적인 관점에서 추진된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IMF 충격이 남북 경험에서 형성된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가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남북 경험의 위축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경험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 교역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 5월까지 총교역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IMF 사태로 인한 외화난으로 주력 반입 품목이었던 금괴, 철강 금속 등의 반입이 대

폭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위탁 가공 교역 규모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8% 감소하였다. 특히,

반입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2.8% 증가를 보인 반면, 반출량은 31.3% 감소하고 있다. 위탁 가공 반입량의 증가가 이전에 반출되었던 물량의 반입임을 감안하면 향후 위탁 가공 교역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북한 투자 협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 4월말 현재 총 32개의 기업이 남북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8개 사업이 남북 협력 사업 승인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 한국통신, 외환은행 등의 경수로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투자 협력은 대우의 남포공단 사업만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남북 경협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교역 규모의 축소와 투자 사업 부진이 계속된다면 남북 경협이 뿌리채 흔들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기업 투자 의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 지원 필요

다행히 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남북 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 가운데 88%는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 차원에서 대북 투자와 남북 경협을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북한도 남한이 IMF 사태를 맞은 이후 남북 경협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남북 경협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냉각된

(표) 최근 남북 교역 동향

(단위: 천 달러)

	반입		반출		합계	
	총액	위탁가공	총액	위탁가공	총액	위탁가공
1996	182,400 (-18.2)	36,238 (71.1)	69,639 (218.6)	38,164 (236.5)	252,039 (-12.3)	74,402 (62.1)
1997	193,069 (5.8)	42,894 (18.4)	115,270 (65.5)	36,175 (-5.2)	308,339 (22.3)	79,069 (6.3)
1998. 1	6,575 (-41.4)	3,260 (31.7)	5,011 (14.2)	1,613 (-25.5)	11,586 (-25.8)	4,873 (5.0)
1998. 2	5,977 (-25.9)	2,073 (-24.5)	3,762 (-67.6)	1,585 (-23.2)	9,739 (-50.2)	3,658 (-31.6)
1998. 3	4,370 (-77.2)	2,165 (-30.4)	7,719 (77.1)	2,563 (117.4)	12,089 (-48.6)	4,727 (10.1)
1998. 4	4,641 (-84.3)	3,077 (18.3)	7,024 (-11.0)	2,082 (-47.4)	11,665 (-68.8)	5,159 (-21.4)
1998. 5	4,622 (-67.8)	2,883 (34.0)	8,930 (-22.3)	2,983 (-49.0)	13,552 (-47.5)	5,866 (-26.7)
1998. 1~5	26,186 (-68.1)	13,458 (2.8)	32,446 (-18.4)	10,825 (-31.3)	58,632 (-51.9)	24,283 (-15.8)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동향」, 제82호, p. 33.

주: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정부가 남북 경협 활성화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실질적인 남북 경협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경 분리에 의한 교류·협력 확대 정책의 실효성 확보, 통일과 21세기 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 구조 조정, IMF체제 극복을 위한 남북 경협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또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가 신정부 출범과 IMF 사태를 계기로 급격하게 해빙 부드를 맞고 있고 남북 경협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 또한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북 경협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교류 규모의 축소와 투자 사업 부진이 계속된다면 남북 경협이 뿌리채 흔들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남북 경협이 남북 관계 개선과 향후 남북 통일,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남북 경협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

IMF 사태 이후 기업들의 대북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정부의 지원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투자 의욕과 투자 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현재까지 중소기업들이 남북 경협의 주역으로 기능을 수행해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첫째, 중소기업들은 교류와 투자 등 모든 면에서 남북 경협의 주역으로 기능을 수행해왔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 90년대부터 남북 교류 실적이 있는 65개 기업 가운데 75.4%인 49개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또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은 32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절반인 16개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남북 경협이 갖는 위험성, 취약한 정보력과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둘째,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장기적인 시장 선점 논리나 홍보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중소기업의 대북 투자는 생존 차원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대북 사업이 남북 관계의 변화에 심한 등락을 보였던 반면, 중소기업의 대북 사업은 남북 관계에 관계없이 꾸준히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는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이 정치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북

한에게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이 북한에게 자본주의 상관행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것이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이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류, 일용품, 완구, 농수산물, 신발, 여행, 각종 부품 및 조립 산업 등 남북 교류 또는 대북 투자 유망 분야는 노동력과 약간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공업 분야로서, 중소기업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남북 관계가 지속될 경우 남북한 투자 협력은 소규모의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중소기업 중심의 소규모 대북 사업은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시설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 개발이 미진한 소규모 북한 시장에 신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수평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남북한 산업 구조 조성

실업 대책과 남북 경협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서 첫째, 실업자들을 위한 창업 자금을 대북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1998년 4월 현재 대량 부도로 인한 유휴 설비는 섬유, 신발, 완구, 피혁, 기계 등의 분야에 10조~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분야의 전문 인력도 상당수가 실업 상태에 있다. 이들 전문 인력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이는 실업 구제와 남북 경협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이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시장 규모와 폐쇄성, 산업 기술 발전 단계상 북한의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대북 투자가 남북한의 상호 보완성을 높여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대북 사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즉시 고용할 수 있고 남한의 유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특히, 향후 기업의 생산 방식이 '소품종대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로 이행하게 될 것이란 점도 중소기업의 대북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남북 경협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IMF 사태 이후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 참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7년 말까지 남북 교역에 참여했던 49개 기업 가운데 1998년에도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은 11개 기업에 불과하다. IMF 사태 이후 高금리·高환율에 따른 자금난으로 하루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부도를 맞

둘째, 벤처 캐피탈의 지원 대상에 대북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넓은 의미의 벤처 사업은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큰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을 지칭한다. 물론, 벤처 사업을 첨단 기술의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면 그 가능성은 낮지만, 대북 사업이 갖는 특징은 벤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는 상황에서 위험이 높고 수익이 불투명한 남북 경험 사업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남북 경험 활성화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실질적인 남북 경험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경험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경 분리에 의한 교류·협력 확대 정책의 실효성 확보, 통일과 21세기 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 구조 조정, IMF체제 극복을 위한 남북 경험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또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적인 법·제도를 지원적 측면으로 전환

우선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의 남북 경험과 관련된 불합리하고 규제적인 법과 제도를 지원적 측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남북 경험에 관한 정보 서비스의 확대, 수송비용 절감 차원에서의 남북간 직수송로 확보, 포괄적 승인 품목의 확대, 남북 교역 물품의 통관 기간 단축 및 간소화, 남북간의 결

제제도 도입과 개선, 통신 및 운송체계 정비 등과 관련한 조치들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간접 지원이 중소기업의 대북 사업 의욕을 회복시

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신정부 출범 이후 이런 측면의 지원은 정경 분리 정책과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간접 지원도 상대적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중소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실업 대책과 남북 경험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

다음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경험 참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및 금융상의 지원이다. 현재 남북 경험이 위축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남북 경험의 환경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적으로도 대규모 기업 부도와 대량 실업의 경제적인 고통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대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WTO체제 하에서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

업의 남북 경협이 갖는 장단
 기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존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남
 북 경협과 연계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실업 문제와 남북 경협을
 연계시킨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
 의 검토를 제안해본다.

첫째, 실업자들을 위한 창업 자금을 대북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현재와 같은 경
 기 불황 상황에서 국내에서 기존 업종의 창
 업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
 질적인 자금 이용도 부진한 상황이다. 그런
 데 1998년 4월 현재 대량 부도로 인한 유휴
 설비는 섬유, 신발, 완구, 피혁, 기계 등의 분
 야에 10조~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고, 이들 분야의 전문 인력도 상당수가
 실업 상태에 있다. 이들 전문 인력들에게 창
 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휴 설비를 북한으
 로 이전할 수 있다면, 이는 실업 구제와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
 하다면 잠정적으로 남북경협기금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형태의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벤처 캐피털의 지원 대상에 대북 사
 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넓은 의미의 벤
 처 사업은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큰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을 지칭한다. 물론,

셋째, 국제 기구의 지원 자금이나 각종의 수출 지원 금융을 대북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경제에 수출이 갖는
 중요성이 큰 만큼 수출 금융의 지원과 남북 경협을 연계하여
 수출 증대를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벤처 사업을 첨단 기술의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면 그 가능성은 낮지만, 대북 사업이
 갖는 특징은 벤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는 점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 기구의 지원 자금이나 각종의
 수출 지원 금융을 대북 사업에도 확대 적용
 하는 방안이다. 물론, 현재까지의 남북 교역
 이 주로 북한 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 자금을 단기적
 으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러나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측면 지
 원하면서 대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
 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경우, 남북 경협을
 통한 수출 증대 효과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 수출이 갖는 중요성
 이 큰 만큼 수출 금융의 지원과 남북 경협을
 연계하여 수출 증대를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
 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내 실업 대책 및 벤처 사업 육
 성, 수출 진흥 정책과 남북 경협을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들의 대북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統

〈漫評〉 43



“빠어난 경관에 호연지기, 조국사랑, 평화정착된다”